

내로남낙... 노조 몽니에 중기중앙회 부회장 인선 난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낙하산)

(상근)

중소 등 관련 공직 30년 생활
10개월 국회 경력 두고 '생떼'
노조 "취임 반대투쟁 총력"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인선을 놓고 노동조합이 막판까지 생떼를 쓰고 있다.

상근부회장에 내정된 인물이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 부처와 여당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10개월 남짓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한 경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중기중앙회 노조가 '정치권 낙하산'으로 간주,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현 더불어민주당 서승원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상근부회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현재 중기중앙회 이사는 57명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통과된다.

이사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결정되면 중기중앙회장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서승원 수석전문위원은 행시 31회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1998년부터 현 중소벤처기업부 전신인 중소기업청에서 줄곧 근무했다.

중기청에선 정책총괄과장, 행정법무담당관, 벤처진흥과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창업벤처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기획조정관 등을 두루 맡았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에서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중기중앙회가 4개월 가량 공석인 상근부회장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중기부 출신인 서승원 수석이 물망에 올랐고, 내정자로 결정하면서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임기가 3년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주무부처 등과 소통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때문에 직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신영선 전 상근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주로 1급인 중기청 차장이 맡아왔다.

중기중앙회 노조가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서 수석을 '정치권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경력이 월등히 많다고는 하지만 이미 퇴직해 당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정당 당직자로 봐야한다. 공공기관도 아닌 순수 민간경제단체에 정당 당직자 출신이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무원 재직 시절 품위수상을 이유로 감봉조치를 받은 인물을 놓고 중기중앙회의 최고결기구인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사회 당일까지도 집회 등을 통해 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임명을 결정할 경우엔 향후 추가 대응방안도 고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앞서서도 서 수석 임명 강행을 민간 경제단체 장악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낙하산 인사로 판단하고 취임 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주변과 중기부 안팎에선 서 수석을 정당 인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는 예산, 산업정책, 환경, 노동 등 각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이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엔 해당 부처로부터 수혈받은 수석전문위원이 부처와 여당간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나 조율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해당 부처에 러브콜은 국회 정책위원회가 하고 부처가 내부 신청 등을 받아 적임자를 보내는 식이다. 물론 공무원 출신인 수석전문위원은 직을 국회에 두고, 월급도 국회로부터 받는다. 지난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의 경우엔 서 수석이 첫 타자였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서 수석이 지금은 당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옮긴지 1년이 되지 않았고, 게다가 중소벤처분야에서 20년을 포함해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던 인물을 여당 당직자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편의점 옆 편의점' 불허

공정위

50~100m 내 신규 출점 제한
유동인구 많은 밀집지역 예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거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0~100m 이내에 편의점을 새로 열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 규약에는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에 앞서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른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또한 규약 참여사는 정보공개서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경쟁사거리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출점 제한은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바 있고,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는 경쟁브

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자율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한다. 이에 국내 편의점 96%(3만8000개)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중소 만난 成 장관 "대-중소 수평적 협력" 강조

(성윤모 산업부)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 논의
중기중앙회 "제조업 혁신 시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회장단 27명과 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의 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업 DNA가 친환경, 스마트화로 획기적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구조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성장사다리 강화와 관련,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지원정책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규, 세제 등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중소기업이 창업후 혁신으로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혁신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

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와 주력산업의 침체, 노동이슈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제조 혁신으로 극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이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 ▲중국제조 2025 ▲일본재흥전략 2016 등 강력한 제조업 부흥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정책적 협업가능 부족과 중장기 플랜 미흡으로 성장동력인 제조업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 현실에 대한 냉

정한 평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법적근거 마련 ▲뿌리산업 공정혁신 및 인력양성 지원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확대 ▲미중 무역분쟁 영향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17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성 장관은 지난달 12일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무역협회(11.22), 중견기업연합회(11.26), 경영자총협회(11.28) 등 주요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삼양그룹 임원 인사... 윤재엽·엄태웅 사장 승진

삼양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재엽 삼양홀딩스 부사장과 엄태웅 삼양바이오팜 대표가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모두 16명의 임원 승진이 이뤄졌다.

윤 신임 사장은 1984년 삼양사 입사 후 재경실 재무팀장, 회계팀장을 거쳐 2007

년 상무로 선임됐다. 2011년 삼양홀딩스 부사장에 이어 이번에 삼양홀딩스 사장이 됐다.

엄 신임 사장은 1983년 삼양제비스에 들어왔고, 삼양제비스 기획부장, 삼양사 식품연구소장 등을 지내고 2010년 삼양사 경영기획실 PMO팀장으로 임원직을 맡았다. 2014년에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재엽 삼양홀딩스 사장 엄태웅 삼양바이오팜 사장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이번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박인웅 기자